

감사원·외교안보 곳곳이 지뢰밭... 여야, 국감 전면전

민주 '유병호 문자' 사건,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대감 게이트' 규정 '북 미사일 발사·핵 실험' 한반도 위기...공영방송 민영화 추진도 쟁점

국회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특히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대상 국감이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라며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규정했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정책 및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편향 감사' 논란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울 태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감 게이트'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에 집의를 집중, 전임 정권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 예정이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여야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고,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 정부를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또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한 '탈북 어린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2주 연속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MBC·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11일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버리고 있다. 한전KDN은 YTN의 1대 주주다.

비속어 논란을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은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오는 14일 보도 경위를 지켜 따져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의 완전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자단화 '윤석열차' 논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및 청와대에서 촬영된 피격 화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

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서 공방이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법원, 가치분 신청 기각...당 대표 해임·차기 총선 공천 사실상 불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탈당권유' 결정을 할 것이라 관측이 나왔으나,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및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강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징계 수위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가열

안철수·나경원 '비윤' 유승민 때리기...친윤 vs 비윤 대결 조짐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의 개막이 예고되면서 몸풀기 수준이던 당권 주자들이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고, 이들 간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구도는 일찌감치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

기현·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정태·윤상현 등 당내 중진 그룹도 기회를 엿보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유력파'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도 잠재적 후보군이다.

'전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주자간 견제

도 본격화했다.

김기현 의원은 10일 SNS에 "차기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철수 의원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까지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호남권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심창욱 광주시의원,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심창욱(민주·북구5) 의원은 지역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최근 조선대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이 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려 올라간 것을 계기로 지역 항공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 마련 의무를 광주 시장 책무로 규정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산업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심 의원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역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